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3.

발 의 자 : 박성민 · 강민국 · 안상훈
박정하 · 최형두 · 서일준
김상욱 · 이현승 · 구자근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,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, 광양만권, 대구경북, 경기, 강원, 충북, 광주,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·운영되고 있음.

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.4km²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,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,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, 리쇼어링·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.

특히,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·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,

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, 입주기업 지원시설·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,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절차 간소화(안 제4조제4항, 제7조의6제1항, 제11조제1항)

- 1)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 절차인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
- 2)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
- 3)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

나. 경제자유구역의 관리·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(안 제9조제6항, 제27조의4, 제27조의8)

- 1)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재한 경

우 시·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

2) 경제자유구역 내의 규제 혁신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확대하고,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
다.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(안
제9조의8제1항, 제18조제2항)

1)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
유지·관리 비용까지 확대

2)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
업 지원시설, 문화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전단 중 “지정한다”를 “지정한다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의6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 계획

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·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.

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의8제1항제2호 중 “설치비용”을 “설치 및 유지·관리 비용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0.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

제13조제2항 단서 중 “기간”을 “개발사업의 시행기간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중 “법 제18조”를 각각 “법 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4제4호 중 “발굴”을 “발굴 및 지원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8(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<u>지정한다</u> .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제4조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지정한다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----- ----- -----.
⑤ ~ ⑨ (생략) 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)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·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이 경우	⑤ ~ ⑨ (현행과 같음) 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·변경·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~ 11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9조(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) ① ~ ⑤ (생략)

<신설>

제9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
① (생략)

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

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·도지사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.

제9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
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불구하고 해당 시·도지사가 결정한다.

제9조의8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
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
비용에의 충당

②·③ (생략)

제11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①
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인가·지정·승인·협의 및 신고 등(이하 “허가 등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9조의8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설치
및 유지·관리 비용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①

-----.

보며,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8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 (생략)

<신설>

제27조(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)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·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. 다만, 제7호,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5. (생략)

16. 삭제

-----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(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) ① -----

-----.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, 제25조,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·시도·군도의 신설, 도로구역의 결정,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(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<u>법 제18조</u>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법 제18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19. ~ 27. (생략)	19. ~ 2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)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<u>발굴</u> 에 관한 사항	4. ----- ----- <u>발굴 및 지원</u> -----
5. ~ 9. (생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27조의8(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)</u>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「 <u>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</u> 」 제72조에도

불구하고 시·도지사와 협의를
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
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
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
있다.